

1. 총평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학 개론 문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암기가 필요한 학자 및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11문제).

특히, 꼭 암기가 필요한 내용으로 6번[Salamon의 정책수단 구분, 알파암기법 - 소대공경 정보(소대를 공경하는 정보)], 12번(Kingdon의 정책의 창, 문제·정치·정책), 18번(French & Raven, 알파암기법 - 보강준정전정보(보강 중에 정전이 발생한다는 정보) 등이 출제되었으며, 법령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본다. 난이도를 분석하여 보면, 기출문제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법령 문제가 1문제(19번 전문경력관 제도) 있고,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된 문제가 1문제(14번) 정도 있다. 다만, 다른 지문에 비추어볼 때 정답 추론이 가능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답을 ‘상’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난이도로 구성된 문제에서 행정학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우수, 80점에서 85점까지는 보통, 75점 이하는 미흡에 해당한다.

2. 출제빈도(영역별과 유형별) 및 시사점

교재 영역별		문제유형별	
기초이론	3	개념문제	2
정책학	4	이론문제	7
조직이론	4	법령문제	7
인사행정론	4	학자문제	4
재무행정론	4	사례문제	
지방자치론	1		
행정환류론	-		

영역별 출제빈도를 보면 행정환류론 부분이 적게 출제되고, 인사행정론과 재무행정론은 평균적인 출제빈도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항상 출제빈도를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영역별 출제 빈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출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영역별 출제빈도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유형별 출제 빈도를 보면, 이론문제가 13문제, 법령문제가 7문제로서 법령 문제의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았다. 다만, 이론 문제 중 학자의 입장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모두 필요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론과 법령 골고루 출제된다는 전제 하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상	-
중상	14, 19
중	6, 7, 8, 11, 12, 15, 16, 17, 18
중하	1, 2, 3, 4, 5, 9, 10, 13, 20

4. 당부 사항

1)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항상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

2)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하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행정학의 경우 이해를 중심으로 하되, 단순 암기사항(법령 내용이나 특정 학자 입장)은 암기해주면 된다.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제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특징이나 장점, 단점 등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3)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라.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신감 상실이다. 그러나 행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온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하기 바란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위계점 올림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상황을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해설] ①(틀림) 상황이론은 일반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을 실용화하려는 중범위이론(中範圍理論)이라고 한다. 상황이론들은 고찰변수를 한정하고 상황적 조건들의 유형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제한된 범위의 일반성과 규칙성을 발견하고(과학성) 처방하려(기술성) 한다. 상황이론은 유일 최선의 조직구조설계는 없다고 본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44-345.

2. 신공공관리이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정치적 논의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②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③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④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 ①(틀림)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체성(identity)을 무시하고, 행정의 정치적·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1) 행정의 정치적·법적 성격 무시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체성(identity)을 무시하고, 행정의 정치적·법적 지배의 성격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2) 행정의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 가치 등한시 :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형평성, 민주성, 가외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3) 공공 책임성 저해 :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자율성·재량권의 갈등으로 정부관료제의 공공 책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 (4) 정치적 통제 곤란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가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공공관리론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가 강화된다는 견해도 일부 있다.
- (5) 조정의 문제 야기 :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 및 권한이양을 강조하는데, 이에 따라 조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 (6) 공무원의 사기 저하 : 신공공관리론은 개방형 계약직(임기제) 임용과 같은 외부전문가의 임용을 강조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 (7)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 시킴 : 신공공관리론은 소비자 주권보다는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는데, 이러한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160.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와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해설] ②(틀림) 'cybernetics'란 인공지능학을 의미하며, 인간의 두뇌가 정보와 환류에 의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모형과 대립되는 적응적·관습적·기계적 의사결정모형이다. 분석적 패러다임(합리모형)이 모든 대안을 동시에 분석하는 반면, 사이버네틱스 패러다임은 대안을 하나 보고 또 하나 보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분석한다.

<롤스(J. Rawls)의 정의론>

1. 롤스 정의론의 의미

(1)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justice as fairness)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옳음에 정의의 기초를 두는 법치론적 윤리설의 관점을 취한다.

(2) Rawls는 원초 상태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고 보았다.

2. 계약 당사자들의 자격요건(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1) 인지상의 조건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무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동기상의 조건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타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self-interest)를 고려하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원칙 : 최소극대화(Maximin) 기준 -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min)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Max)를 추구할 것으로 가정한다.

3. Rawls의 정의론에서의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equal liberty)

① 정치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1원칙이기 때문에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2) 정의의 제2원칙 - 정당한 불평등의 조건

① 기회균등의 원칙 : 불평등의 모체가 되는 직위 등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기회균등의 원리는 정당한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불균등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② 차등의 원칙 : 정당한 불평등의 원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극빈층)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Maximin 기준). 차등의 원칙은 결과상의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3) 세 가지 원칙들 사이의 우선순위

①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② Rawls의 정의론은 자유주의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중도적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기반한 Rawls의 정의론은 복지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184-185.

6. 살라몬(L.M.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정책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ㄱ. 조세 지출(tax expenditure)
-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ㄷ. 정부 소비(direct government)
-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ㅂ. 보조금(grant)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해설] ③(옳음) 박스의 내용 중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 공기업 등이 직접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직접적 정책수단과 간접적 정책수단(Salamon)>

직접성	행정수단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관리 가능성	정당성 (정치적 지지)
낮 음	바우처,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 출자기업, 손해책임법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중 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높 음	정부 소비, 직접 대출,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보험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210.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일선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한다.
-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정확하다.
-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해설] ①(틀림) 정책고객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대응책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정책고객을 흑인과 백인,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 전과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각각 대응한다는 것이다.
 ②(틀림) 일선행정관료들이 일하는 부서 자체의 목표들이 모호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수행을 목표와 연계시켜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④(틀림) 일선행정관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만든다. 일선행정관료의 자율성을 갖는 이유는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 상황이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업무가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일선행정관료의 대응 방식>

(1) 단순화·정형화·관계화

- ① 일선행정관료들은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의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의 단순화·정형화·관계화를 꾀한다.
- ② 한편 정책고객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대응책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정책고객을 우호적 집단과 비우호적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대응한다는 것이다.

(2) 고객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방식

- ① 할당배급 방식
- ② 제한된 고객집단에만 유용한 정보 제공
- ③ 시간과 금전적 비용 지불 요구 - 다른 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는 방법
- ④ 고객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대가 지불 요구
- ⑤ 창구를 하나만 만들어 고객을 지치게 하는 방법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93-294.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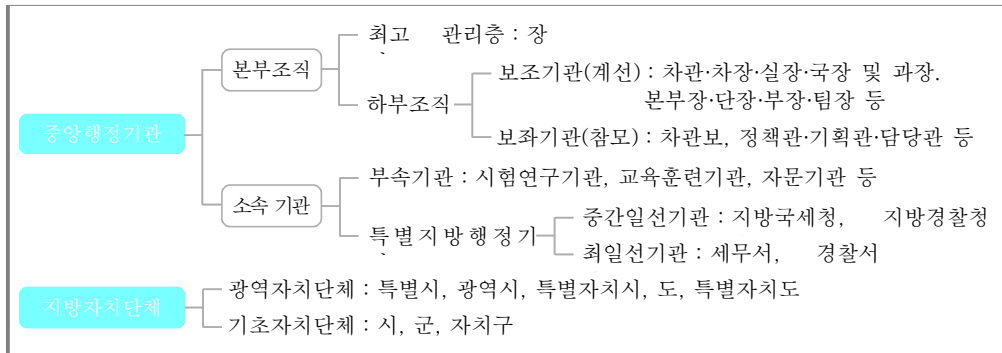
-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경심사위원회 등은 재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예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 ②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 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 ③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④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해설] ①(틀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경심사위원회 등은 모두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②(틀림) 하부기관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의미하고, 소속기관은 부속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의미한다.

③(틀림)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 단,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보좌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옳음) 부속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되어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다. ㉠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363-366.

9.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는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설] ①(틀림)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틀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틀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 면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감액되며(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0%, 5년 미만인 경우 25% 감액), 퇴직수당은 50% 감액된다.
	해 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임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수당이 감액되지는 않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가 감액(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5%, 5년 미만인 경우 12.5% 감액)되며, 퇴직수당은 25% 감액된다.
	강 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다만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 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경징계	감 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 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17.

10. 정부회계의 가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정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해설] ①(틀림)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한다. 현금의 증감 발생 시에 회계처리하는 현금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

이에 반해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는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이중기록한다. 복식부기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여(대차평균의 원리)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경제 활동의 발생 시에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

<회계제도의 유형>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가장 방식에 의한 분류이고, 현금주의,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등은 거래의 인식 기준에 의한 분류이다. 일반적인 정부회계의 경우 주로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단,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도입)를, 기업회계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형 기금의 경우 수정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

인식 기준 가장 방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단식부기	가계부나 정부회계	단식부기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단식부기 하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기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한다.
복식부기	현금 기준 재무상태변동표, 금융기관 재무제표	기업회계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52-655.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④(틀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통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예산원칙 중 예산 단일성 및 한정성(초과지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반적으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제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3회 내지 4회까지도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편성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599.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 (policy windows)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 ②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③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④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다.

[해설] ③(틀림) 정책흐름모형(Kingdon)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흐르는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등)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된다고 본다. 세 가지 요소의 흐름이 결합하는 현상을 Kingdon은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였다. 정책의 창은 세 가지 요소의 흐름이 결합되어야 열리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린 후에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요소가 사라지면 정책의 창도 쉽게 닫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219, 277.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처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간단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해설] ②(틀림)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수평적 연결방법이다.

<Daft의 수평적 조정장치와 수직적 조정장치>

(1) 수평적 조정장치

- ① 정보시스템 → 직접 접촉 → 태스크포스(임시작업단) → 프로젝트 매니저 → 프로젝트팀(영구사업단)
- ② 프로젝트팀은 가장 강력한 수평적 연결장치로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을 때 활용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이다.

(2) 수직적 조정장치

- ① 계층제 → 규칙과 계획 → 계층 직위의 추가 → 수직정보시스템
 - ㉠ 규칙 : 규칙은 의사소통 없이도 업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정보자료를 제공한다.
 - ㉡ 계획 : 계획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장기적인 표준정보를 제공한다.
- ② 수직정보시스템은 수직적 조정의 필요성이 가장 높을 때 활용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이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383.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②(틀림)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1)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1)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603.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③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해설] ②(틀림) 결산은 수입·지출의 실적에 대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하며, 1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행정부의 결산, 감사원의 결산확인·검사, 의회의 결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예산절차가 완료된다.

[정답] ②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644-645.

16. 공무원 부패의 사해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8 국가직 9급

-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금행료'를 받는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급 명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의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ㄱ	ㄴ	ㄷ	ㄹ
①	제도화된 부패	회색 부패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②	일탈형 부패	생계형 부패	조직 부패	회색 부패
③	일탈형 부패	백색 부패	제도화된 부패	비거래형 부패
④	조직 부패	백색 부패	생계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

[해설] ③(옳음) ㄱ.은 일탈형 부패, ㄴ.은 백색부패, ㄷ.은 제도화된 부패, ㄹ.은 비거래형 부패(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561-562.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해설] ③(틀림) 지방자치법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옳음)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한다. 그리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옳음)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옳음)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의 원칙)

[정답] ③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771-776.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 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상징(symbol) ② 강제력(coercion)
③ 전문성(expertness) ④ 준거(reference)

[해설] ①(틀림) 프렌치와 레이븐이 분류한 권력의 원천에 상징(symbol)은 없다.

<French & Raven의 분류>

- (1) 보상적 권력(reward power) :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보상의 예에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 (2) 강요적 권력(coercive power) : 강요적(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이것은 권력 행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 (3)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 : 준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이것은 복종자가 자기 행동의 모형을 권력 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에 성립한다. 준거적 권력은 일면 카리스마와 유사하다.z
- (4) 정통적 권력(legitimate power, 합법적 권력) : 정통적 권력은 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에 추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을 말한다. 정통적 권력은 Weber의 권위(권한)와 대단히 유사하다.
- (5) 전문가적 권력(expert power) : 전문가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전문가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 (6) 정보적 권력 : 후에 추가된 것으로, 조직의 내부적인 운영이나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나 접근점을 지닐 때 생기는 권력이다.

[정답] ①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451.

19. 전문경력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
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허용한다.
- ③ 전문경력관 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해설] ②(틀림)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을 말한다.

<전문경력관>

- (1) 의의 :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을 말한다.
- (2) 지정 : 소속장관은 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3) 구분 :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직위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 (4) 신규채용 : 전문경력관은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채용한다.
- (5) 전직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②

☞ 참고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직 9급

-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적 해결책으로 계약 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 ③ 사용자 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해설] ④(틀림)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구 분		공급 책임 (arranger, 배열자 또는 중개자)	
		정 부	민 간
생산 담당 (producer)	정 부	•정부의 직접공급 방식 •정부 간 계약 방식	•정부서비스판매 (government vending)
	민 간	•계약(contracting-out) •허가(franchise) •보조금 지급(grants)	•이용권 지급(vouchers) •시장공급(market) •자원봉사조직(voluntary service) •자급 방식(self-service)

[정답] ④

☞ 참고 : 2018 7·9급 알파행정학, pp.88-91.